

## 데스크칼럼

## 김인수

사회부장



지난 가을, 광주 광산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인터뷰 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교육부로 다 넘어갔는데, 정작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남 순천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는 또 다른 고민을 전했다. “하나의 체계로 묶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은 하지만 무언가 손해 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기대와 불안, 환영과 혼란이 교차하는 풍경. 이것이 지금 광주·전남 유보통합 현장의 솔직한 얼굴이다. 30년 넘게 논란이 반복되던 유보통합이 행정 일원화라는 가시적 단계에 들어선 것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다. 그러나 통합은 선언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교사 자격의 통합이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는 양성 과정과 자격 기준, 전문성의 방향이 다르다. 이를 단기간에 하나의 자격으로 묶으려는 시도는 현장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유보통합 간담회가 열릴 때마다 미묘한 긴장이 흐른다고 한다. “우리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교사들 사이에서 표출되고 있기 때

## 유보통합은 ‘속도보다 어울림’

문이다.

전남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은 더 복잡하다. 전남지역은 경력 많은 보육교사들이 지역 돌봄을 사실상 떠맡치고 있는 구조다. 이들에게 일괄적인 추가 교육이나 자격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도 낮고, 지역 돌봄 체계를 흔들 수 있다.

그래서 교사 자격 통합은 ‘직선 도로’가 아니라, 지역과 경력, 역할을 고려한 ‘느린 곡선’이어야 한다.

행정 통합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관리 부처는 지난 2024년 6월 교육부로 일원화됐지만, 광주·전남의 보육 행정 실무는 여전히 지자체에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중앙의 지침과 기존 복지 행정 체계 사이에서 현장 공무원들은 새로운 연결 고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의 통합보다 더 어려운 것은, 20~30년간 굳어진 업무의 관성을 다시 깨는 일이다. 충분한 로드맵 없이 추진될 경우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재정 문제는 광주·전남에서 특히 민감하다.

민간·사립 시설 비중이 높고, 소규모 어린이집이 많은 지역에서 예산의 불확실성은 곧바로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진다. 과거 누리과정 예산 갈등 당시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이유다. 유보통합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교사 자격 통합은 단계적이고 차등화된 상향 평준화 방

식으로 접근해야 그나마 원만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신규 교사부터 통합 양성 체계를 적용하고, 기존 교사에게는 지역 기반 연수와 충분한 전환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찬회 역시 갈등을 완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분명한 원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한 유보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이와 부모의 삶은 결국 지역 행정과 맞닿아 있다. 교육부·교육청·지자체 간의 삼각 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통합은 ‘서류 속 제도’에 그칠 뿐이다.

무엇보다 유보통합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 논의가 가열될수록 정작 영유아는 논리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현실이다. 지역에서 작은 어린이집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은 단순한 시설 폐쇄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런 지역성을 반영하지 않는 통합은 ‘소탐대실’의 헛발질로,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유보통합은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함께 가느냐’의 문제다.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조정하며,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특히 광주·전남처럼 사립·민간 어린이집 비중이 높고, 농산어촌 돌봄 수요가 고르게 분포된 지역일수록 ‘속도전’이 아닌 어울림에 기반을 둔 ‘맞춤 설계’가 절실하다.

## 기고

##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혐오 현수막을 민주주의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했고, 이후 행정안전부는 혐오·비방성 표현에 대응하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기준’을 시행했다. 표현의 자유의 사각지대에서 몸집을 불려 온 혐오의 언어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선언이다.

그러나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실천이다.

광주 광산구가 지난 8일에 전국 최초로 혐오 현수막의 내용을 판단하는 행정체계를 가동한 것은 혐오의 언어를 지역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결단이다.

출퇴근길과 학교 앞, 시장과 도로변에 걸린 자극적이고 적대적인 혐오 문구는 인권 감수성을 존중으며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적대시하는 언어가 반복될수록 사회는 분열되고, 상생과 신뢰라는 민주주의의 기틀에 금이 간다.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제도 하나로 유지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닦고 조이고 기를치지 않으면 교장 나는 자동차와 같다. 방치하면 멈추고, 무관심하면 방향을 잃는다.

## 혐오 현수막 난립…민주주의·시민 일상 위협

혐오와 거짓, 차별의 언어를 그대로 두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서서히 무너진다. 민주적 절차로 집권한 나치, 그리고 12·3 비상계엄이 남긴 폐해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광산구는 중앙정부의 기준 제시 이전인 올해 1월부터 혐오 현수막을 선제적으로 철거해 왔다.

지금까지 철거한 혐오 표현 현수막은 150여 건에 이르고, 이를 계기한 일부 정당에 16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던 상황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에 정면으로 대응한, 사실상 유일한 사례다.

광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내에 전문가와 법률가가 참여하는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수막의 내용을 판단하는 공식 절차를 마련했다.

형식 요건만 보면 관행에서 벗어나 혐오·차별·하위 정보를 행정이 책임지고 판단해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특히 광고 관련 교수 등 기존 위원 3명에, 법률 전문가 2명을 추가로 위촉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들 5명의 전문가는 내용 판단이 애매한 혐오 현수막에 대한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24시간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는 전국 최초 원칙이다.

이를 통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이중 정비망’을 완성한 것이다. 1차적으로 설치 규격을 어긴 현수막을 즉시 정비하고, 설령 규격은 지켰더라도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2차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하는 방식이

다.

이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혐오 표현을 일삼던 현수막들에 대한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일반 현수막에는 허가를 요구하면서도 정치활동 목적의 정당 현수막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일부 정당이 혐오 현수막을 거리로 내걸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러나 시민과 기업은 단속하면서 정당은 예외로 두는 행정은 공정할 수 없다. 법 앞의 형평성과 행정의 일관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신뢰의 출발점이다.

혐오에 대응하는 기준은 결국 인권이다. 혐오는 약자와 소수자를 골라 공격하고, 이것을 방지되면 또 다른 먹잇감을 찾는 괴물이다.

이런 흐름을 외면하면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 내 가족이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역사가 반복해 보여준 민주주의 붕괴의 경로다. 일상에 스며든 혐오를 더 이상 안일하게 뒤서는 안 되는 이유다.

광산구의 혐오 현수막 대응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다. 시민이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감정적 언어에 휘둘리지 않도록 돕는 민주주의의 예방 장치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강해지지 않는다. 깨어 있는 시민과 책임 있는 행정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작동한다. 혐오가 설 자리를 잃을 때 공동체는 다시 대화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품격은 그렇게, 일상의 공간에서부터 지켜가야 한다.

울기려는 시도다. 공항과 맞닿은 농업은 곧바로 수출과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항 인근에 추진되는 항공 MRO 산업도 주목할 대목이다. 항공기 정비는 숙련 인력과 기술 축적이 핵심이다. 단기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분야다. 공항을 둘러싼 도시 구상이 소음 민원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주거·산업·교육을 함께 묶는 이 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앞설 수는 없다. 재원 조달 방식과 부지 용도, 주민 수용성, 민간공항 선 이전을 둘러싼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다만 이번 합의의 의미는 분명하다. 무언이 요구해 온 핵심 조건들이 문서로 확인됐고, 논의가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로 옮겨졌다는 점이다.

공항 이전은 지역에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안긴다. 이번 합의는 무언에 기회를 건넸다. 이제 관건은 약속을 실제 사업으로 옮길 수 있느냐다.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공항 기능 강화가 계획대로 이어질 때 비로소 공항 이전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 사설

##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속도감이 ‘생명’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통합 이전에 합의한 무안군에 장밋빛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서남권 거점공항 도시로 성장하고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잇따라 펼쳐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 등이 제시한 무안군 지원 계획들을 살펴보면 그런 전망이 나올 만하다. 먼저 무안에 조성비용만 7600억원으로 추산되는 지역 첫 국가산단이 조성된다. 통상 지자체 공모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지정까지 7~10년이 소요되는 데 전남도는 이를 최대한 압축 4~5년 내 완공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한 지정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도로·전력 등 기반 시설 설치비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고속도로·철도·항만 등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도 용이하다.

국·지방세 감면 혜택은 물론 입지·설비 보조금, 인허가 신속 처리,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등 기업 유치에 유리한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입주, 정부 전략산업 연계 등 산업 집적 효과도 있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정주여건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무안에 국비 3395억원이 투입돼 농업 AX실증센터 구축 등 지역 발전을 이끌 각종 기반 조성사업과 남악~오룡지구 진입도로 신설 사업 등 SOC 확충 등도 이뤄진다. 하지만 이 같은 미래는 통합공항 이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때에만 가능하다.

이번 합의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타결된 경향이 짙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현 정부에서 이를 위한 모든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데 이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차기 정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득시무태(得時無怠)’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좋은 때를 얻으면 태만함이 없이 일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인데 이번 군공항 이전사업도 속도감이 생명이라는 얘기가.

## 광주 북구 ‘청년공작소’를 아시나요

광주 북구 ‘청년공작소’가 눈에 띈다. 이는 오랜 기간 활용되지 않던 영구임대아파트내 지하상가 공간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해 창업 초기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창업 공간을 말한다.

현재 북구 청년 창업 공간은 각하 청년공작소, 두암4스마트타운, 오치마을공방, 두암2스마트케어빌리지 등 4개소다.

입주 기업에게는 2년간 개별 사무실이 무상 제공되며, 동당대 창업보육센터, 광주디자인진흥원 등 창업 교육기관과 연계해 마케팅, 시제품, 브랜딩 개발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사업 초기, 고민거리인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에선 지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이 공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북구의 이해 관계가 맞물린 결과물이다.

LH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쾌적한 녹색건물로 탈바꿈시키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창업 생태계를 만들려는 북구의 계획이 맞아떨어져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공임대주택 유휴공간 사용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협약을 맺었고 첫 프로젝트로 지난 2020년 각하 영구임대주택 지하상가에 각하 청년공작소를 조성했다. 현재 8개의 청년기업이 입주해 있다.

2022년에는 CT 분야 5개 기업이 터를 잡은 ‘스마트타운’을 두암주공 4단지에 만들게 됐고 같은 해 오치주공아파트에 공예 분야 6개 기업이 입주한 ‘오치마을공방’을 조성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두암주공 2단지 에 ‘스마트케어빌리지’를 만들어 청년 창업가 5명이 입주해 있다.

이곳에 등지를 뜬 청년 창업가들은 최근 3년간 150여회 컨설팅, 행안부, 광주시 등 판로 지원 사업에 60여회 참여하며 사업 기틀을 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각하창작소 2억2600만원, 오치마을공방 1억4000만원, 두암4스마트타운 13억8100만원 등 총 17억4700만원의 매출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또 자체 전시회를 열고 주민 대상 작은음악회, 봉사활동 등 주민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던 공간이 창업 공간으로 재탄생해 청년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거점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 회장 양진석  |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 사 경리장인 이승배   | 주필 김상훈 | 편집국장 최현수 |
|---|--|--|--------|----------|
| <b>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b><br>우편번호 61234<br>대표전화 (062) 370-7000<br>팩스 (062) 385-5400 | 정 치 부 370-7010<br>경 제 부 370-7020<br>사 회 부 370-7030<br>문화체육부 370-7234<br>편 집 부 370-7082<br>사 진 부 370-7050 | 는 설 실 370-7200<br>임 원 실 370-7000<br>총 무 국 370-7093<br>사 업 국 370-7090<br>광 고 국 370-7070<br>독자관리국 370-7080<br>서울지사 ☎978-7090 |        |          |
| 1995년 12월 12일 창간<br>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  |  |        |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  |        |          |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  |        |          |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